

# 공무원 정신건강 위해 부처 협력 나선다

- 11개 부처 '범정부 마음건강 협의체' 발족, 심리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

공무원의 정신건강 회복과 심리재해 예방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이 처음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교육부·외교부·국토교통부 등 11개 기관\*과 함께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범정부 마음건강 협의체'를 발족했다고 29일 밝혔다.

\* 인사혁신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외교부, 법무부(교정본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문화재청

협의체는 공무원의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심리재해 예방을 위한 부처 간 협력과 사회적 재난 등 발생 시 현장 공무원에 대한 심리지원 및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축됐다.

앞으로 협의체는 ▲기관 간 상시 연락체계 유지 및 현장 공무원 심리지원 협력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기관별 심리재해 사각지대 해소 및 개선 ▲사회적 재난 등 발생 시, 현장 대응 공무원 신속 지원·협력체계 마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8일 처음 개최된 '범정부 마음건강 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는 교육부의 교원 마음건강 지원 상담, 고용노동부의 사고 후유장애(트라우마) 전문 상담 및 진료비 지원 등 각 참석 기관에서 기관별 특성에 맞춰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공유됐다.

또한, '온라인 공무원 마음건강 자가진단 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공무원 정신건강 관련 지원 수요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국가 및 지자체, 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 전 부처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고, 간편하게 주기적으로 진단이 가능한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 서비스에 대해 공무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인사처는 ‘마음건강 자가진단’ 서비스 진단 결과, 심리지원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대해 전국 8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상담을 연계해 회복·치유 프로그램 참여 또는 전문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서울, 과천, 대전, 세종, 대구, 광주, 인천, 춘천 등 8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협의체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재난 발생 등의 상황에 따라 수시·개최할 계획이다.

인사처 구혜리 재해보상정책담당관은 “공무원의 정신건강은 업무수행 능력과 직결돼 대국민 서비스 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협의체 참여기관과 협력해 공직사회를 행복한 일터로 만들기 위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사업들을 혁신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범정부 마음건강 협의회 운영 계획

담당 부서	재해보상정책관	책임자	과 장	구혜리 (044-201-8131)
	재해보상정책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임미영 (044-201-8194)

## □ 운영 목적

-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재해 적극 예방을 통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부처 간 협력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6조(재해예방), 제47조(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영 제 57조(재해예방 지원 사업)
- 사회적 재난 등 발생 시 재난 특성에 적합한 공무원 심리지원 협력 지원체계 신속·체계적 가동

## □ 운영 개요

- (주재)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 (참여) 범정부 마음건강 협의체 참여 희망 11개 기관\*
  - \*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법무부(교정본부), 외교부, 문화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 (운영) ▲ 정기(연 2회/ 관리자급·실무자급 각 1회), ▲ 수시(재난 발생 등)

## □ 주요기능

- 기관 간 상시 연락체계 유지 및 현장 공무원 심리지원 협력
-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기관별 심리재해 사각지대 해소 및 개선
- 사회적 재난 등 발생 시, 현장 대응 공무원에 대한 신속 지원·협력체계 마련